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746
----------	-------

발의연월일 : 2025. 6. 12.

발 의 자 : 황운하 · 강경숙 · 신장식
김준형 · 박은정 · 전용기
김재원 · 백선희 · 서왕진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난 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p>제106조(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단서 신설></p> <p>3. ~ 11.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106조(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 -----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다만,</u> <u>「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난 때로 한다.</u></p> <p>3. ~ 11.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